

## 제366호 (2012. 6. 25)

---

### ■ 경제 동향

- 4월 국내 건설수주 4.4% 감소

### ■ 정책 · 경영

-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 발주/입찰 제도의 혁신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 ■ 정보 마당

- IPD와 Project Alliancing의 이론적 배경 분석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그래도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 4월 국내 건설수주 4.4% 감소

- 민간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 감소로 두 달 연속 감소 -

### ■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해 예년보다 부진

- 4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4월 실적으로는 6년래 최저치인 6조 3,738 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함. 결국 지난 3월의 3.5%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함.
  - 민간 부문은 3월과 4월에 각각 전년 동월비 6.4%, 5.8% 감소해 전체 수주 감소를 주도
  - 이는 지난 1~2월에 급등한 민간 발전 및 기계설비 공사가 3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4월 들어 비주거용 건축수주 또한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임.

### ■ 공공 부문 : 발전소 및 토지조성 공사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

- 4월 공공수주는 토목수주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1조 4,380억원을 기록,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다만, 2002~10년 간 4월의 민간수주 평균 금액이 1조 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상으로는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토목수주는 한국남동발전의 발전시설 공사와 토지조성 공사 증가의 영향으로 동월 대비 1.9% 증가한 9,678억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LH공사의 발주는 감소하였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아파트 발주 물량과 작년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51.9% 증가한 2,279억원을 기록함.
  - 반면,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27.2% 감소한 2,423억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함.

#### <2012년 4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1. 4월	6,669.9	1,432.4	949.7	482.7	150.1	332.7	5,237.4	1,026.8	4,210.6	2,633.7	1,577.0
2012. 4월	6,373.8	1,438.0	967.8	470.2	227.9	242.3	4,935.8	860.5	4,075.3	2,834.5	1,240.8
증감률	-4.4	0.4	1.9	-2.6	51.9	-27.2	-5.8	-16.2	-3.2	7.6	-21.3
2011. 1~4월	22,946.0	5,527.8	3,452.8	2,075.0	607.0	1,468.0	17,418.2	5,062.5	12,355.7	7,497.8	4,857.9
2012. 1~4월	28,605.5	7,077.7	4,866.0	2,211.7	1,183.7	1,028.0	21,527.7	6,411.9	15,115.8	8,916.0	6,199.8
증감률	24.7	28.0	40.9	6.6	95.0	-30.0	23.6	26.7	22.3	18.9	27.6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토목과 비주거용 건축의 부진으로 5.8% 감소

- 4월 민간수주는 토목 수주와 건축수주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4조 9,358억원을 기록
  - 토목수주는 그동안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기계설치 수주의 위축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8,605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
  - 주택수주는 재건축·재개발 수주의 호조로 7.6% 증가한 2조 8,345억원을 기록. 반면,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상업용 건축의 부진으로 21.3% 감소한 1조 2,408억원을 기록함.

■ 건축에서는 사무실과 관공서가, 토목에서는 철도와 기계설치 수주가 부진

- 세부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에서는 사무실 및 점포와 관공서 수주가 부진하였음.
  - 주택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하였음. 공장 및 창고 수주 또한 46.9%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반면, 사무실 및 점포와 관공서 수주는 각각 49.3%, 2.5%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의 경우 철도 및 궤도, 기계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주는 양호하였음.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민자 고속도로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 올 들어 가장 높은 6,345억원을 기록
  - 철도 및 궤도 수주는 185억원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96.4% 감소함.
  - 토지조성 수주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증가로 66.4%가 증가
  - 발전 및 송전 수주는 157.3% 급등한 1,798억원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한편, 지난 1~2월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의 영향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기계설치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0.4% 감소해 지난 3월의 부진을 이어감.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상하수도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2. 4월	3,062.4	517.5	472.2	419.0	74.4	634.5	18.5	55.1	460.4	179.8	359.9
증감률	10.0	-49.3	46.9	-2.5	-46.0	62.9	-96.4	151.7	66.4	157.3	-30.4
2012.1~4월	10,099.7	2,980.6	1,836.5	2,065.4	345.3	1,702.3	140.3	235.4	1,222.4	3,995.9	3,214.7
증감률	24.6	-2.5	51.1	17.4	17.7	92.0	-90.0	-19.8	8.1	397.9	1.5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발주/입찰 제도의 혁신\*

- 가격 경쟁 축소 및 발주기관이나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평가 필요 -

### ■ 불합리한 원가 산정 체계 및 발주자 우위의 사업 발주 방식 개선

- 예정 가격의 합리화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에 맞춰 각종 설계 단가를 삭감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입찰자가 삭감된 기초 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발주자의 인위적이고 무리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면제되도록 개선
- 실적공사비 축적시에는 실제 하도급 거래 단가 등 시장 가격의 반영
  - 2004년에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년 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사실상 하락
  - 지속적으로 시장 거래 가격의 축적이 가능한 민간의 적산/견적 전문기관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공사비 축적 및 운영 체제로 전환 검토
- 공기 연장시 간접비 보상 및 공사에비비(Contingency) 제도 도입
  -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도 발주자의 귀책이나 불가항력에 의해 공기 연장이 발생한 경우, 간접비 등을 보상하여 계약 금액 조정 필요
  - 건설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에비비 제도의 도입 검토
- 선보상/후시공 제도 도입
  - 국내 공공 사업의 대부분은 공사 시행 중에 용지 보상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공기 지연, 공사 중단, 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
  - 보상 업무가 일정 수준 완료된 후에 착공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 장기계속공사의 계속비 공사 전환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 배정이 불확실하여 완공 지연 등의 문제점 빈발
  - 댐, 발전소 등과 같이 사업 전체가 완결되지 않으면 시설물의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12일에 개최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 게재되어 있음.

없는 경우에는 사업 전체를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

## ■ 발주/입찰 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기술 경쟁을 강화해야

- 최근 들어 건설투자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음. 따라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건설 정책이 입안될 필요성이 있음.
  -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량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최근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이 발표되고 턴키 입찰에서는 가격 평가가 강화되는 등 공공공사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 수주가 빈발하는 현상의 개선 필요
  - 향후 입·낙찰 제도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입찰 제도의 고도화를 통하여 업체의 전문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가격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 최저가낙찰제 폐지 → QCBS(Quality-Cost Based Selection) 형태의 입찰 제도 활성화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가 2년 간 유예되었으나, 최저가낙찰제는 적자 수주와 부실시공, 외국 인력 채용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입찰 제도가 요구됨.
  -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무조건 의무화하는 경직적인 규제 폐지
  - 단순히 철근이나 레미콘 등 본 공사 물량 삭감을 유도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 폐지
- 발주 방식 다양화 및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 프로젝트의 특성 및 공사비, 공기, 요구 성능 등을 중시하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발주 방식을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책임(재량권)과 권한 강화 필요
  - 획일화된 평가 항목이나 배점 방식을 지양하고, 발주기관이나 해당 프로젝트별로 특화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며, 이에 적합한 평가가 요구됨.
- 기술 경쟁 및 입찰자에 대한 실적 평가 강화
  - 공사의 내용이나 입찰 내역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에 입찰 참여가 가능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대상의 입찰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실적 평가에서 벗어나 과거의 시공 성과(Past Performance)에 대한 실적 평가나 계약 당사자로서 신인도 평가를 강화해야 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 부동산 자산의 점진적 축소 및 유동화, 다양한 임대용 주택의 공급 활성화 -

### ■ 노인 가구, 부동산 자산의 점진적 축소-다양한 연금 및 유동화 방안 요구됨

- 점차 저출산 · 고령화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미래 사회의 불안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령 가구의 경우 가계의 지나친 부동산 자산 의존 구조를 변화시키되 일괄적인 매각보다는 임대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유동화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유동화 및 처분 방식이 고민되어야 할 것임.
- 보유 중심에서 거주 및 이용 중심으로의 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 다양한 임대용 주택의 공급 환경 조성 필요
  - 질적 주거 소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시장의 형성이 필요
  - 계층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에서부터 고급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의 등급별 다양화는 물론, 초단기 임대에서부터 장기 임대에 이르기까지 임대 계약 기간에 대한 유연성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함.
  - 공유형(Sharing) 주거, 코하우징(Co-Housing) 등 세대 및 계층 간 혼합이 주거 공간과 주거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인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이 되어 주택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생애 그 어느 시기보다 길어짐. 따라서, 과거보다 더욱 편리하고 기능적인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아직까지는 항시적으로 돌봐야 하는 고령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시설 중심의 노인 주거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료 노인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 가구나 고소득층이 아닌 중 · 서민층의 보편적인 노인 가구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12일에 개최한 ‘차기 정부의 건설 ·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등재되어 있음.

에 대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대안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노인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은퇴 이후에도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계속 거주하려는 노인 인구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택의 개·보수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주택 개축 및 리폼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금융 상품의 개발이 요구됨.
- 기존의 주택연금의 경우 주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향후의 주택연금은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금융으로도 대체가 가능해야 할 것임. 아울러 불필요한 대형 주택은 일부를 수익형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미국의 UBRC\*, 코하우징 등 대학이나 지역 단체와 함께 이뤄지는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과 주거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도 요구됨.

## ■ 가족 구성 가구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책과 연계해야

- 가족 중심의 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산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시도가 요구됨.
  - 공동주택 안에 교육 및 보육시설의 보장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육 지원과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주거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 노인들의 일자리와 세대 간 통합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보육 서비스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 시스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이는 노인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젊은 세대와 소통하게 함으로써 고령 사회를 보다 활기차게 만드는 역할도 가능).
- 내 집 마련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제도의 정책 방향 재정비
  -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다양하고 양질의 민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선(과표에 대한 가속상각제 등)을 통해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게 해주고, 임대주택 수익률을 개선시켜줄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양도세 감면이나 주차장 등 건설 기준 완화, 저리의 건설 자금 등의 지원이 있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 동안의 수익률 보전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 대학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은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니어 커뮤니티가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은퇴자 커뮤니티와 대학이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는 구조

## IPD와 Project Alliancing의 이론적 배경 분석

- 관계적 계약 : 계속 변하지만 거래적 전속성을 갖는 조정 과정을 지니는 계약 -
- 미국의 프로젝트 통합 발주(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나 호주의 프로젝트 연합(Project Alliancing, PA)은 공사 참여자들에게 리스크를 엄격하게 할당하는 전통적인 발주 방식과는 달리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발주 방식임.
- 이에 관계적 프로젝트 발주 장치(Relational Project Delivery Arrangements, RPDA)로 불림.
-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란 계약의 효과가 계약 당사자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하고,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편익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는 계약을 의미함.
- 즉, 계약 문서에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조건은 계약의 개요에 불과하고 묵시적인 계약 조건과 계약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가 계약 당사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계약을 의미함.

### ■ 규범 기반 접근법(Norm-Based Approach)

- 맥네일(Macneil)\*은 모든 계약은 한 극단의 ‘단순 독립 교환’(Discrete Exchange)으로부터 또 다른 한 극단에 관계적 계약이 있는 계약 범위를 형성한다고 주장함.
- 계약의 관계는 교환과 그 교환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상의 다양한 규범을 지니는 ‘미니 소사이어티’(Mini-Society)의 특징을 갖게 됨에 따라 계약의 단순 교환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함.
- 따라서, 맥네일은 단순 독립 교환이란 공통의 언어, 질서 유지 시스템, 화폐 시스템, 약속을 구속하는 법률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창조된 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가장 작게 포함된 교환이라고 정의했음.

\* Macneil, I. R., "The Many Futures of Contract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1974, pp.691~816.



- 맥네일은 계약이 이러한 범위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범(Norm)이 결정된다고 주장함.

## ■ 불완전 계약 접근법(Incomplete Contract Approach)

- 완전한 계약(Complete Contract)이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계약 조건으로 규정하고, 규정된 계약 조건이 모두 완전하게 이행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완전한 계약은 현실 사회에서 불가능함.
- 완전한 계약이 불가능한 이유는 첫째,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무수히 많아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 둘째,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을 이행하는 비용, 협상 비용 등 계약 이행(Contractual Performance)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완전한 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인지 알 수 있는데, 계약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인지 알 수 없음.

## ■ 건설공사 계약과 관계적 계약

- 건설공사 계약과 같이 장기적이고 복잡한 계약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속 변하지만 거래적 연속성을 갖는 조정 과정(Adjustment Processes)을 통하여 진행 중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존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은 원래의 합의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양자의 경우 차이는 없음.
  - 즉, 관계적 계약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의 규범 즉, 상호 조직 간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특정한 규범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18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경제과 주최, 통계 개선 TF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li> <li>- 건설 및 주택 관련 통계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li> </ul>
6. 20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안정국 주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석</li> <li>- 주제(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과제 :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관련 토론</li> </ul>
6. 2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정비과 주최, 정책 연구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석</li> <li>-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 연구 착수 보고 내용 관련 자문</li> </ul>
6. 22	건설관리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위원회 주최, 여성건설인포럼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li> <li>- 발표 주제 :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건설인 인재상</li> </ul>
	IT코리아 정책위원회 (대통령 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산업 선진화포럼 주최, SW산업 해외 진출 방안 토론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li> <li>- SW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벤치마킹에 대한 자문</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부담금 평가단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li> <li>- 건설 관련 부담금 통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li> </ul>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정책과 주최,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석</li> <li>- 건설 기술 인력 분야에 대한 자문</li> <li>• 건설경제과 주최, 건설산업공생발전실무위원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구범 연구위원 참여</li> <li>- 건설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 건설 분야 행정 제재 합리화 방안, 건설 발주제도 개선 방향 등 논의</li> </ul>

■ 국제지속가능협의회 창립 기념 학술 발표회 공동 주관

- 연구원은 6. 19(화)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환경부가 후원하는 국제지속가능협의회(회장 : 신성우) 창립 기념 학술 발표회를 주관
-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 IT, 경제, 철학, 도시·건축, 문화 인류, 신재생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 교육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6. 26(화)~28(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전망과 동향 / 자금 조달 / PF 사례 연구 / 현금 흐름 분석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Tel. 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그래도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반대편까지 날아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려던 국내 전문가 8명 등 14명이 끝내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본인들과 가족은 물론 기업과 국민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다. 희생된 한국인 8명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수자원 전문가들이라 한국 건설의 큰 손실이기도 하다. 건설은 예로부터 편안한 자리보다 거친 자연에 맞서 일을 소화 해 왔다.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과 사회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건설은 도전과 희생의 반복이다. 전쟁과 다름없다. 오죽하면 건설 현장의 상황실을 ‘War Room’으로 부를까.

한국 건설이 진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고갈돼 버렸다. 페루와 같은 신흥국 발주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판이하게 다르다. 대형화를 넘어 초대형화로,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단품 생산에서 종합단지 개발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변화했다. 또, 생산 기술을 넘어 경제와 금융, 그리고 시장 창출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문 지식과 광범위한 역할을 요구한다. 페루의 수자원개발사업도 복합개발 성격을 띠고 있다. 사업 지역의 광역화는 물론 물자원 확보,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등 다목적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 가야 할 시장이다.

이번 사고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기업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페루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게 거는 기대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남미와 아프리카 권역은 국내 기업들에게 익숙지 않은 시장이다. 하지만 잠재력은 무궁할 정도로 시장성은 높다. 정치·사회가 안정화 될수록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지역들이다. 슬픔과 손실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희생된 본인과 가족들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사업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의 사고가 고인들의 희생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해당 기업들은 물론 한국 건설이 해결해야 할 공통된 숙제다. 희생된 전문가들의 이름이 완공된 사업 목적물 곳곳에 남겨져 찾는 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건설을 폄하 혹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한국건설의 가치는 항상 국가위기에서 빛을 발휘해 왔다. 완벽하게 안전한 시장은 없다. 안전하게 만들어 내는 것도 건설의 몫이다. 이번 사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난보다 격려가 필요하다.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2,200년 전 한니발장군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험준하면서도 얼어붙은 알프스산맥을 넘어가며 한 말처럼 미지의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건설인들에게 필요한 말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며, 혹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진격할 것이다”. <건설경제, 2012. 6. 18>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